

광주군공항 이전 이번엔 꼭 해결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원을

광주시·전남도, 요청 총선공약 뭐가 있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4·15총선 국회의원 출마자와 각 정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결국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주요 현안 사업을 함께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다.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 내 현안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도는 총선·대선 때만 되면 주요 현안사업과 건의사업 등을 출마 후보자와 각 정당에 제출하고,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광주시는 목은 현안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총선 공약에 담아줄 것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간 해결하기 힘든 첨예한 대립점이 있는 만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힘을 실어줘야만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민선 7기 주력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중심 산업 혁신 및 노사상생 경제도시 구현 사업 등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입장에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사업 중 하나다. 시는 광주 송정역 KTX 투자선도도시 조성, 서남권 중심 광주 송정역사 증축,

市, AI 중심도시·달빛내륙철도

송정역 투자선도도시 조성 등 호소

道, 서해안 해상 풍력발전단지

한전공대 특별법 등 36개 제안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광주 제3순환도로 4구간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건설 지원 등을 현안사업으로 꼽고 있다.

특히 첨예한 광주시 북구 광주역 일원을 되살릴 수 있는 광주역 신 경제거점 조성 및 도시재생 기반 구축 사업도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땅 주인인 코레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총선공약에 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총선 정책공약'으로 7개 분야 36가지 현안사업을 제안했다.

다만, 민선 7기 전남도가 최근 총선 공약반영 건의사업으로 정한 36개 현안 중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사업 등 일부 공약의 경우 타 사·도와 경쟁하는 상황이라서 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전남 서해안을 무대로 한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가칭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지원 공약이 눈에 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2029년까지 신안 해상 일원에 민간자본 48조3000억원과 국비 2000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소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 8.2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상시 일자리 4000개를 포함, 11만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다.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유치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시 산포면 일원에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둘레 1.5km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농림수산분야 공약에서는 2028 전남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도서민 1000우니 여객선 시행,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국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관광문화분야에서는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사업 지원, SOC분야에 선 특산공항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분야 정책공약으로는 전남도 핵심 현안 사업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사업 지원이 포함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 광주 동남을·북구갑·을 경선 시작

27~29일 3곳·내달 1~3일 4곳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광주 동남을과 북구갑, 북구를 선거구에 대한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4·15 총선 당내 경선에 본격 돌입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26~28일 광주 동남을, 북구갑, 북구를 경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선거구별 경선에 들어간다.

동남을 선거구에서는 김해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과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경선을 치른다. 북구갑은 정준호 전 대통령후보 청년 법률특보단장과 조오섭 전 문재인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경합한다. 북구를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형석 최고위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쟁한다.

27~29일에는 해남·완도·진도, 목포, 여수를 선거구에 대한 경선이 치러진다. 해남·완도·진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윤광국에 비후보와 전 해군 군수사령관이자 지역위원장이었던 윤재갑 예비후보가 본선 티켓을 놓고 대결을 벌인다.

다음달 1~3일에는 광주 광산구갑과 나주·화순, 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 등 4곳이 경선을 치른다.

광산갑은 이석형 전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과 이용빈 전 대통령후보 광주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맞붙는다.

나주·화순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과 손금주 현 의원, 신정훈 전 의원 간 3인 경선이 이뤄진다. 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김승남 전 의원과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이, 영암·무안·신안은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삼석 의원이 격돌한다.

광양·구례·곡성 선거구는 아직 경선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이 개호 현 의원이 단수추천됐다. 순천 선거구는 선거구 확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경선 후보 선정이 미뤄지고 있으며, 여수갑 선거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여성 할당 공천 등을 주장하고 있어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 유일 현역인 송갑석 의원의 선거구인 광주 서구갑은 송 의원이 단수 후보라는 점에서 추가 후보를 공모했지만, 추가 후보자가 나서지 않아 조만간 단수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경선은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투표 50%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50%를 합산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 용량을 고려해 30명씩 순차적으로 경선을 실시, 다음달 10일 전체 경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선 후보들은 여론조사가 마무리된 뒤 각자 상황에 맞는 가점 또는 감점을 받는다.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 등은 10~25%의 가점, 현역 '하위 20%'나 경선 불복·탈당·제명 처분 징계 경력자 등은 15~25%의 감점이 각각 적용된다.

당 선관위는 경선 결과 발표 때 가점과 감점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등수만 공개하기로 했다. 1~4차 심사 결과까지 발표한 공천위는 다음주 심사를 이어가 남은 지역과 추가 공모를 받은 지역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추가 공모를 받은 단수신청 지역의 경우 공모자가 없으면 단수 공천을 확정하되, 일부 지역은 다시 추가 공모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5일 대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의료원에서 파견 의료진(오른쪽 사복 입은 두 명)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코로나 차단 행정력 총동원...추경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당정청은 코로나 감염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봉쇄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업,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또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코로나 19 차단 주요 대책

- 추가 확산 방지 조치**
 -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한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통상의 조치보다 방역망을 촘촘히 하는 최대한의 방역성 '봉쇄' 조치 시행,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님.
 - 집회 금지에도 강행할 경우 경찰력 동원
- 마스크 수급**
 -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절반은 의무적으로 농업,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적으로 공급
 -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해서 마스크 무상공급 확대
 - 마스크 수출 물량, 생산량의 10%로 제한
- 경제 영향 최소화**
 - 추경 편성 공식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을 시 긴급재정명령 검토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 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차에는 깜빡했니? 2차에도 놓칠거니?

학기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3일(월) ~ 3월 10일(화)

★신입생은 반드시 신청! ★1차신청 놓친 재학생도 신청가능!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월) 9시 ~ 3.10.(화) 18시
※ 신청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3.(월) 9시 ~ 3.12.(목) 18시

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신청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 가능(재학 중 2회에 한함)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방법

○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